

청소년의 이공계 기피와 이공계 푸대접 현상이 표면화 된 이후 이에 대한 대책이 잇달아 발표되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내어 놓은 대책들은 대개 단기적이어서 오히려 과학기술계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것도 적지 않아 문제이다. 이공계 외면이나 푸대접 현상은 우리사회에 뿌리가 깊은 문제이니 만치 단기적인 것 보다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정 부 가
9월 이공
계 지원
책의 하
나로 발
표한 이
공계 해
외 유학
생 지원 책

도 국내 대학의 반발을 사고 있다. 이 지원책은 이공계 해외유학생 가운데 매년 1천명을 선발 4년간 1만~4만달러의 유학비용을 지원한다는 것이 골자이다. 이 사업에 내년에 3백억원의 예산을 책정했다고 한다. 이 사업이 국내 학계의 반발을 사게 된 것은 정부가 해외 유학생을 지원할 경우 우수 학생들이 해외에 빠져나가 그러지 않아도 지원자들이 줄어 들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대학원 교육이 더욱 황폐해질 것은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정부가 이공계의 사기를 올려주기 위해 마련한 사업이 반대로 사기를 떨어뜨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공계의 사기 진작을 위한 사업이라면 미리 과학

기술계의 중지를 모았었어야 했다는 의견이다.

물론 과학기술의 발전을 위해서 두뇌들을 해외에 보내어 선진 지식을 익히게 하는 것은 절대 필요하다. 우리나라가 오늘날 경제 발전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해외에서 훈련을 받은 브레인 풀(Brain Pool)이 중요한 역할을 한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하루가 달라지는 현대과학기술을 외국 훈련에 의존 할 수만은 없는 노릇이

다. 그러나 운영관리가 제대로 되더라도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특히 최고과학기술상의 경우 상금에 걸맞는 수상자를 걸러낼 수 있느냐가 이상의 제정취지를 살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종래의 시상제도처럼 누적 업적이나 '나누어 먹기' 식으로 운영될 경우 차츰 분쟁거리가 될 위험성도 있다는 의견들이 적지 않다.

이공계 기피 문제는 우리나라만의 문제만은 아니다. 미국이나 일본 같은 선진국에서도 청소년들이 힘이 들고 어려운 이공계를 외면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이공계 기피' 대책】

국내 대학원 교육 해치는 '유학생 지원책'
장기적이고 문화적인 접근을

다. 세계 1백대 안에 드는 국내 대학이 하나도 없는 실정이고 보면 해외 유학생 지원책을 세우기 전에 국내 대학을 국제 수준으로 키우는데 관심을 더욱 집중해야 한다는 게 중론들이다.

또 정부가 이공계 사기 진작 차원에서 각종 포상제도를 확대한 것도 앞으로 운영체계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을 경우 오히려 사기를 저하 시킬 위험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상금이 3억원에 이르는 최고 과학기술상, 우수과학교사상, 이달의 엔지니어상 등을 제정 내년부터 시상할 계획이다. 이처럼 시상제도를 확대하는 것은 과학기술자들의 사기를 올리는데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이

이 문제가 한국사회에서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그 정도가 심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 이 문제가 사회적인 이슈가 될 지경에 이르러진 것은 우리 사회 자체가 사농공상(士農工商)의 전근대적인 의식구조가 판치고 있는데다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출연연 구기관들이 '동네 북'처럼 구조조정 대상이 되고 IMF이후 연구인력이 대거 길거리로 내 몰린 것이 촉발요인이 됐다는 분석이다. 우리나라에서 불고 있는 이공계 기피 문제는 사회 문화적인 현상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단기적인 대책보다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과학을 숭상하는 문화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태풍 루사가 2백70여명의 인명피해, 8만 명이 넘는 이재민 그리고 5조 4천억원에 달하는 재산피해를 입히는 등 온 나라가 물난리를 겪었다. 이 숫자는 우리나라 태풍사상 최대의 인명과 재산 피해 기록이다.

이번 태풍도 최근 기상재해가 날이 갈수록 대형화하고 있는 추세를 그대로 보여 주었다.

특히 동해안 지역에 내렸던 1일 강수량 8백70mm의 폭우는 최근 우리나라를 강타하고 있는 기상재해가 '기상이변'에 의한 것이라는 느낌을 준다.

갈수록 대형화되고 있는 기상재해는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세계 모든 나라들이 겪고 있는 공통 거리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문제는 이번 태풍피해에서 보여 준 것처럼 인명손실이 두드러지게 많다는 점이다.

루사와 같은 A급 태풍은 선진국에서도 엄청난 재산피해를 주고 있다. 그러나 인명피해는 고작 몇 명에 그치는 게 상례이다. 가까운 일본의 경우만 보더라도 우리보다 더 많은 태풍을 겪고 있지만 인명피해는 한, 두 명에 그치고 아예 없는 경우도 많다. 소위 중진국을 벗어나 선진국 문턱에 들어 섰다는 나라에서 태풍으로 3백 명에 가까운 아까운 목숨을 잃

었다니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그만큼 자연재해에 대한 방비나 안전관리가 허술한 탓이다.

기상재해 가운데에서 인명피해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은 산사태이다. 이번 물난리에서도 산사태에 의한 인명피해가 많이 일어난 것은 예외가 아니었다. 이처럼 산사태 피해가 많은 것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배산임수(背山臨水)를 제일의 주거지

구조를 지녀 작은 강수량에 견디지 못하고 피해를 주는 일이 적지 않다. 부실한 제방 외에도 준설 등 하천관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것도 큰 문제이다.

외국에는 건설에 못지 않게 관리에 신경을 쓰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하천 예산의 8.6%만이 관리에 쓰이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강원도 수해 지역에서 유실된 교량들이 아예 철근을 사용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 충격파를 던졌다.

우리나라에 세워진 크고 작은 다리의 대부분이 부실구조를 지녔

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번 태풍 피해에서도 이처럼 허술한 재해방비 부실이 곳곳에 드러나 천재(天災)가 아니라 인재(人災)관재(官災)라는 주장이 제기되어 논란거리가 되었는데.

최근 기상재해가 규모가 커지고 이변의 성격까지 띄고 있는 만치 국가적으로 방재에 대한 투자가 대대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과학기술계도 해마다 국민의 재산은 물론 인명까지 앓아가는 재해에 대한 연구에 보다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①

【대형화 '기상재해'】

태풍 하나에 5조원 재산에 3백명의 인명을 잃다니 과학계도 '종합적인 방재과학'에 노력 기울여야

로 삼는 바람에 사태의 위험이 큰 지역에 인구밀도가 높은 탓도 있다.

이처럼 산사태 피해가 해마다 늘어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이 전무한 형편이다.

일본은 '산사태 방지법'과 같은 특별법을 만들어 산사태 피해를 예방하고 있고 대만도 토사이동을 관측해서 사태 위험지역에 대한 경보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우리나라도 산사태 피해에 대한 안전관리체계가 시급히 갖추어져야 할 것이다.

산사태와 아울러 하천관리 부실에 의한 피해도 적지 않다는 지적이다. 우리나라 하천제방의 80%가 부실한

姜信龜 (한서대 교수)